

개막 6개월 앞둔 U대회 잦은 불협화음 ‘뒤숭숭’

육상경기장 트랙 시공사 선정 놓고 경쟁업체 헐뜯기

조직위 직원들 승진 유리한 본청 복귀 로비전 치열

개막 6개월을 앞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새해벽두부터 갖은 논란에 휘말리면서 성공 개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광주U대회 육상경기장 트랙 시공사 지역업체 선정을 놓고 타지역 업체를 비롯한 경쟁업체들이 헐뜯기에 나서는가 하면, 광주U대회 조직위의 직원들은 광주시 인사철을 맞아 본청 복귀 경쟁을 하느라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직위 직원들의 경우 U대회 폐막후 조직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본청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려는 계산에서다.

1일 광주시와 광주U대회 조직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5일 광주 U대회 육상 경기장

훈련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과 광주체육고, 풍암체육공원, 영주체육관 등 4곳의 육상 트랙 자체 2만8431㎡를 24억6800만원에 합평 소재 업체와 제3자 조달입찰방식으로 계약했다.

U대회 육상 트랙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인증과 함께 조달 우수제품이어야만 가능하며, 국내에서는 플러버 등 8개 회사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광주시 삼도동과 인접한 합평 월야에 동지를 이 업체는 재활용 고무분말 대신 천연 고무와 합성고무를 섞은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CLASS 1급 경기장의 시공실적이 없는 탓에 해외수주에 예로를 겪고 있다. 이

업체는 CLASS 1급 경기장인 이번 광주 U대회 트랙 수주로 이탈리아 업체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세계 트랙시장에 한국 대표 주자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타지역에서 재활용 고무분말과 합성수지 등을 이용해 육상트랙을 생산중인 모 업체가 광주시와 플러버의 계약단가를 놓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업체에 따르면 U대회 육상 트랙 자체의 ㎡당 조달 단가는 합평 업체의 경우 8만8000원(22억원 이상 다량 구매시 할인율 3%)이며, 자신들은 9만5100원이지만 다량 구매 할인율이 15%나 적용돼 전체 구매 금액은 오히려 1억 3000여만원이 저렴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이번 트랙시공을 놓고 외국업체인 M사와 광주 U대회 조직위측이 스포츠용품 협찬을 대가로 이면협상을 벌였다는 의혹까지

결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2개 업체의 제품 중 가격 확인 당시 가격이 낮고 지역업체 제품을 최종 선정했다”면서 “다만 다음날 탈락한 업체에서 할인을 적용시(2주일 전 할인을 신실) 자신의 제품이 더 저렴하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지역기업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원안대로 결정했다.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직위 내부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U대회 조직위의 일부 직원들이 대회를 불과 6개월 남겨놓은 시점인데 승진시 유리한 본청으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 치열한 로비전을 벌이고 있어서다. 따라서 성공적인 U대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직위 근무자에 대한 인사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전남도, 도서개발사업 최우수

여수시, 기초단체 최우수기관 선정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도서개발사업(특수상륙지역) 평가’에서 전남도가 광역단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에, 여수시가 기초단체 최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섬 지역 소득 증대와 생활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서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평가 기준은 계획 대비 사업 추진 실적과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 효과, 지자체와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 및 참여 실적 등이다. 전남도는 여수의 금오도(생태의 섬), 상·하화도(꽃의 섬), 백야도(가족의 섬) 등 섬별로 독특한 주제를 적용해 그에 맞는 개발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주변 관광자원인 해변, 숲을 연계한 ‘해도림(海島林)’의 업무표장 등록, 온·오프라인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 현장 해빙기 안전점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 등의 관계자 역량 강화에 힘쓴 것도 한 몫 했다.

여수시는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 별도 설계비를 반영한 동절기 설계지원단을 운영하고,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민원을 최소화해 사업의 적기 추진에 기여한 점이 인정됐다.

최종선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도서종합개발 사업의 주목적인 주민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 증대사업과 함께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새해부터 본격 추진할 도 브랜드 사책인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조병휘 DJ센터 사장 사의

광주시는 1일 “조병휘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임기 시한 5개월을 앞두고 지난 31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임기는 3년으로 오는 5월 8일까지다.

조 사장의 조기 사의에 따라 광주시가 시의회 협의를 거쳐 추진 중인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의 도입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출자기관장의 정실 인사를 견제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주장해왔으며 시도 도입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시는 2월까지 시의회와 협의를 마친 뒤 이르면 5월 임기가 끝나는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신입 컨벤션센터 사장 임명 때까지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해 첫날 독도 경비작전 펼치는 세종대양함 2015년 올미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동해 독도 해상에서 해군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양함이 기동경비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광주시·광산구 고위직 인사 협의 ‘진통’

광산구, 부구청장 區 전입 조건 4급 市 전출 요구에 市 “사례없다”

광주시 고위직 인사가 ‘관례’라는 벽에 가로막혀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시의회와의 고위직 승진·전보 인사로 마찰을 빚은 데 이어 일부 자치구와 고위직 인사 교류를 놓고도 난항이다. 이 때문에 애초 연말로 예고했던 인사 일정도 해를 넘겼으며, 새해 벽두부터 인사 행정 차질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광주시는 1일 “지난 30일 단행할 예정인 서기관(4급) 이상 전보인사가 광산구와의 협의가 안 돼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광산구와 최종 조율을 거친 뒤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2일 광산구(부구청장)를 제외하고, 전보 인사

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산구는 현재 지방부이사관(3급)인 부구청장의 구 전입 조건으로 4급 서기관(행정직)의 시 전입을 요구하고 있다. 광산구는 최근 결원이 2명뿐인 서기관 직급에서 1명이 초과한 3명을 승진의결하는 등 전례가 없는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시는 그동안 부구청장 교류를 조건으로 각 구청에서 고위직을 전입 받은 사례가 없는 만큼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또 이 같은 전례에 따라 매년 하위직의 시 전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하지만 민선 5기때부터 부구청장의 구 전입

을 조건으로 서기관의 시 전입을 요구해 온 광산구의 입장은 확고하다. 광산구는 관련법상 자치구 소속 직원의 임명권은 구청장에게 있는 만큼 부구청장 인사권도 구청장에게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광주시와 광산구의 입장이 맞서는 것은 행정 관례 때문이다.

광주시는 지난 86년 광역시로 승격한 이후 국가직 4급이 구청장직을 맡아왔으며,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선 이후에는 광주시에서 파견한 지방직 3급(기존 국가직 4급)이 부구청장을 수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광주시가 구청장과 협의를 통해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광산구가 관련법을 거론하며 부구청

장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아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충돌하게 된 것이다.

최근 광주시와 시의회간 사무처장(2급) 전보 충돌도 이 같은 인사 관례를 놓고 문제가 됐다.

시의회는 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의장과 사전 조율해야 하는 만큼 사무처장 승진·전보 인사도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시는 협의는 가능하지만 승진인사까지 관여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인사 관례를 보는 시각이 서로 상충한 것이다.

결론은 시의회에서 시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마무리됐지만, 인사철만 되면 언제든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산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간 협의 없는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광역 및 자치구가 상호 존중과 협의를 통한 인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교통 편해진다

1일부터 서울 남부터미널 버스 운행

내달부터 광주 시내버스 노선 추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입주민들에 대한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일부터 혁신도시~서울(남부터미널) 간 시외버스가 운행을 시작했다. 또 지난 30일부터 목포~혁신도시 간 시외버스를 1일 3회 운행해 도청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간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전남도는 빛가람 혁신도시 주민들이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동 시 영산포나 나주터미널로 이동해 갈아타야 하는 교통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시외버스노선을 개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의 및 정류장 신설 등을 준비해왔다.

또 나주시는 2월부터 광주시와 혁신도시 간 시내버스 노선을 추가로 신설하고,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리는 것은 물론 나주와 광주를 오가는 대다수 노선이 혁신도시를 경유도록 시내버스노선 체계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혁신도시 경유 시내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해 20~30분 간격으로 배치하고, 혁신도시 경유 시내버스를 현재 134회에서 272회로 138회를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요청사항인 혁신도시와 광주시 간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 중이어서 조만간 택시로 인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택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두 도시를 오가는 택시에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중운임 배제 등 수요자 입장에서 적정 요금을 책정하는 등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